

## Agricultural Policies in OECD Countries: At a Glance - 2006 Edition

Summary in Korean

### 2006 년 OECD 국가 농업정책 총관

국어 개요

#### 총괄요약

#### OECD 지역의 농업부문은 높은 지지수준이 여전히 특징이다

2005 년 OECD 국의 생산자에 대한 지지규모는 %PSE 측정으로 총농가수취액의 29%가 되는데 이는 2004 년에 동일한 수준이나 1986-88 년의 37% 수준보다는 덜하다. 2005 년 PSE 추정치는 2 조 8 백억 불 또는 2 조 25 억 유로다. 생산자 지지, 소비자료의 예산 이전, 농업의 일반서비스 등을 합한 농업부문의 총지지규모는 GDP 대비 비중이 1986-88 년 2.3%였고 2005 년에는 1.1%에 맞먹었다.

#### 생산과 무역에 가장 왜곡적인 정책 도구에서의 탈피는 계속되는 상황이다.

정책 개혁으로 생산자에 대한 지지 제공 방식이 변하고 있다. - 생산이나 투입 활용에 연계된 지지 등 - 생산과 무역에 가장 왜곡적인 지지 유형은 생산자 지지 대비 비중이 1986-88 년 91%였는데 2003-05 년 72%로 줄었다. 국내산지가격과 국제가격 간 격차의 뚜렷한 감소로 알 수 있듯 생산연계 지지 규모 역시 줄었다. 1986-88 년 OECD 국내산지가격 평균은 국제가격보다 57% 높았던 반면 2003-05 년 이 격차는 27%로 하락했다. 이러한 유형의 지지 감축이 경지면적이나 가축 수, 과거에 부여된 자격기준에 기초한 보조금직불의 증대를 수반하면서 농가 수취액에 미치는 영향은 줄었다. 이 직불제는 특히 환경상의 이행확보 요건을 점점 내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생산 및 투입 활용에 연계된 정책조치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전히 생산자 지지의 주조를 이루면서 산출 장려나 천연자원에 보다 역점을 두게 되므로 무역 왜곡의 결과가 야기된다. 게다가 정책 목표 및 수혜 대상을 명료히 정의한 목표지향적 정책 수립에서는 소폭의 전진만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따라서 정책방안이 운영상의 투명성을 보장받고 특정 결과 초래를 겨누면서 변하는

우선순위에 대응할 만큼 유연성을 갖추게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 농업정책 개혁에서 국가마다 편차가 드러났다

1986-88 년 이후 생산자 지지는 총농가수취 대비 비중을 토대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하락했다. 이 지표의 %p 최대폭 감소는 캐나다, 멕시코 (1991-93 년 이후), 뉴질랜드가 이루었다. 지지수준이 높은 국가 가운데 최대폭 감소는 아이슬란드, 스위스, 한국이 이루었다. 농업지지 총규모의 GDP 대비 비중으로 측정할 때 농업의 총지원규모는 거의 모든 OECD 국에서 줄어들었다.

## 2005 년 일부 정책 변화는 전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되었고 기타 변화 사항은 결정 과정을 마친 상태다

유럽연합은 2003 년 개혁을 계속 집행하여 우유 지불제로의 부분적 이전을 모색하면서 EU 의 10 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단일직불제를 도입했다. 한국은 쌀정책의 수정안 집행에 착수하여 정부 수매량 폐지와 직불제 개시를 강구했다. 캐나다는 농가소득지불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가장 최근의 특별 지불제 일례로써 생산자에 대한 예외적 지불을 실시했다. 미국은 담배 부문의 쿼터와 가격 지지를 일정 기간의 지불제로 대체했고 낙농품 관련 소득 상실 지불제는 2007 년까지 확대했다. 터키는 농업개혁집행계획을 2007 년까지 확대했다. 아이슬란드는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국내 기관을 재편성했다.

2005 년 유럽연합위원회는 설탕체제의 변화를 모색하자는 데 동감했다. 원당 및 백설탕의 정해진 가격은 2006 년부터 인하되고 신규 지불제를 단일직불제에 통합할 것이다. 아울러 2007-13 년 기간에 걸친 전원개발규제 또한 채택된 상황이다. 일본은 식량, 농업 및 전원지를 관련한 신규 기본계획을 마련했는데 2006 년부터 신규 직불제를 도입하여 지지 기준을 이전의 개별 품목에서 다품목 위주로 전환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노르웨이는 전국적 환경 프로그램에 관한 최종 협정에 이르게 되었고 지역적 프로그램은 수립해 놓은 상태다.

## 농업정책의 다자간 개혁은 여전히 곤란 사안으로 남아 있다

무역 협상 관련 도하개발아젠다(DDA) 라운드는 2004 년 합의 하의 농업 기본틀을 토대로 한 논의 상태로 계속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종가관세 등가의 수립 방식이 하나 마련됐고 구체적 제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2005 년 12 월 홍콩각료회의 협상을 통해 2013 년 말까지 온갖 유형의 수출보조를 나란히 제거하고 동등한 효과를 갖는 모든 수출조치에 대한 규율 강화를 보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는데 이는 물론 DDA 에 관한 합의 도출에 대체로 크게 좌우된다. 나아가 무역 왜곡적인 국내지지 유형이나 시장 접근 제고, 특히 관세율 인하 등에 관한 중요 사안 또한 여전히 미결 상태로 남아 있다. 따라서 농정 개혁 과정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으려면 이러한 협상 분야에서 진전을 강구토록 하는 것이 절실하다.

© OECD 2006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붙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http://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mailto:rights@oecd.org)

팩스: +33 (0)1 45 24 13 91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http://www.oecd.org/righ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